

안녕하세요. 연이은 폭염과 이상기후로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 역시 중요해지는 8월, 이번 호에서는 탈탄소 전략, 산업안전, ESG 의무공시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의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 발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의 10년만의 개정 등 중요한 이슈가 이어졌는데요,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8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Contents

- 01 ESG Keyword 【탈탄소 전략 · 산업안전 · ESG 의무공시】
- 02 ESG Trend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
- 03 ESG Policy 【2026년 8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 04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DERI 제4기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9월 시작 / 한국ESG연구소 「2026년 하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성료】
- 05 APPENDIX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2】 한국ESG연구소, 2026년 KRESG 1차 평가 결과 발표

Environmental Issue : 탈탄소 전략

ESG Keyword

지역이 탄소중립 주도... 기후부, 실행전략 공개 (연합뉴스, '26.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071800530?input=copy>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 하에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지자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가 추진되며,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 시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 평가에 탄소중립 성과를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위해 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7대 부문별 녹색 기반시설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무탄소 전원 비중, 2040년 73%까지 끌어올리기로 (연합뉴스, '26.07.21.)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095800530?input=copy>

정부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될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 계획은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탄소(Carbon-Free) 전원* 발전 비중을 2030년 53%, 2040년 73%까지 확대하고, 신차 중 전기·수소차 판매 비율도 2040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과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며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무탄소 전원: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친환경 연료 발전 등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ESG경제, '26.07.22.)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18>

2031~2049년의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부재가 미래세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 이후 약 2년 만에, 2050 탄소중립에 이르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년 53~61%, '40년 69~80%, '45년 84~90% 감축 및 5년 단위 감축 경로와 연도별·부문별 목표 수립을 의무화하며,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과중하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세대 간 형평성 원칙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영향, 과학적 기준 등을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본회의 통과 시 중장기 감축계획 수준에 머물렀던 2030년 이후 감축 경로가 법률상 의무로 격상될 예정이다.

ESG Keyword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치...영세사업장서도 줄었다 (연합뉴스, '26.07.15.)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4061000530?input=copy>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고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전년 동기(287명) 대비 34명(11.8%) 감소했다.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치이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 모두 산재 사망자가 줄었지만,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떨어짐 사고 예방과 제조업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500명 이상 사업장, 8월부터 하청 사망사고 의무 공개 (뉴시스, '26.07.2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1_0003716476

정부가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의 하청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까지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부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구분	근거법률	주요 내용	시행령 시행일
안전보건공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안전보건공시 대상)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② 공공기관 ③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시 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재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공사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	'26.8.1.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위촉권자) 고용노동부장관 (위촉 대상)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위촉. 단,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해야 함 (주요 업무) 사업장 점검·감독 참여, 산재 예방계획 수립 참여,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법령 위반 시 사업주에 시정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사업주에 작업 중지 요청,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및 결과 설명회 참석, 직업성 질환·질병자 다수 발생 시 사업주에 임시건강 진단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산재 예방정책 건의, 안전·보건교육 고양 활동 지원 등	'26.8.1.
위험성평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 제36조, '27.1.1. 시행 예정 법 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마련 (실시 의무 위반 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부과)	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안전보건 개선계획 명령	법 제49조, 제56조, 시행령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산재율이 동종 업종 규모별 평균 산재율 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재가 최근 1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26.8.1. (*7.28.)

[자료] '26.07.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참고 재구성

ESG Keyword

"연결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6.07.08.)

<https://www.fnnews.com/news/20260708182204094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안은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 통합 공시로 시행되며, 대상 기업은 2029년 자산 5조원 이상 상장사 157개사, 2030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59개사까지 추가 확대된다. 제도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한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급망 데이터 수집과 법적 리스크 등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며 대상 기업 및 시행시기의 속도조절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SG 공시 로드맵」 주요 내용	
공시시기 및 대상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 '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 '28~'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 연결기준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
공시채널 및 면책	-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예측,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
제3자 인증	-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스코프3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 후 '31년부터 공시 시작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 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

[자료] '26.07.08,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참고

의무화 코앞인데..."자산 하위 20% 공시율 0%" ESG 공시 '빈익빈 부익부' (헤럴드경제, '26.07.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8970>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FY2027 ESG 의무공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간 공시 준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산 규모 상위 20%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율은 76.2%에 달한 반면, 자산 하위 20% 기업은 0%였다. 국민연금 투자 규모가 크거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인 기업일수록 자발적 공시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업력이 길고 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은 공시 역량과 인프라 부족으로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분석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ESG 의무공시 제도 도입에 맞춰 탄소규제 노출 여부를 고려하고, 공시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장기 업력 제조기업으로 컨설팅·파일럿 테스트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기업의 ESG 공시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해서는 본 뉴스레터【APPENDIX 1】 참고

ESG 법정공시 초읽기...기업 이사회 책임 커진다 (한경ESG, '26.08.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31691G>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8일 ESG 공시 방안을 발표하며 2028년부터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험 등을 3월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폭넓은 면책을 제공하지만, 기업이 합리적 근거와 검토·승인 절차를 갖췄음을 입증해야 면책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ESG 공시는 전담 조직을 넘어 재무·법무 부서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전사적 내부통제 업무로 전환되며, 공시 책임의 중심도 CFO와 이사회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제3자 인증 요건 등 세부 규칙이 아직 미완성이라 제도 시행 초기 진통이 예상된다.

ESG Trend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26.07.08.)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적시성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수요 증가
- 중동전쟁 이후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s) 가속 필요성 대두, 기후·에너지 리스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과제로 부상
- '26.2.25.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이 발표된 이후 공개 의견수렴 진행
- 국회에서도 사업보고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수 발의

2. 개편 방향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 재설정

“26. 7. 8.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발채’

- 글로벌 기관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공시 로드맵,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 기관의 전방위적 지원
- **(로드맵 초안 대비 의무화 대상 확대)** 2028년(FY27 사업연도 결산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법정공시 의무화 적용
- **(법정공시 직접 편입)** 거래소 공시 생략,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공시 미이행 또는 허위공시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

3. 주요 내용

[표 1] ESG 의무 공시 적용 대상 및 공시 기준

구분	내용			
공시 적용 대상/시기	구분	2028년(FY27)	2029년(FY28)	2030년(FY29) 이후
	적용대상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연결자산 5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연결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검토)
	대상기업수(예상)	107개 사(종속회사 포함 291개 사)	157개 사(종속회사 포함 3,171개 사)	259개 사(종속회사 포함 3,749개 사)
	종속회사 범위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 공시 면제	전체 연결 종속회사 포함	전체 연결 종속회사 포함
공시 기준	▪ '26년 2월 제정된 한국형 공시기준(KSSB) 적용 ▪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는 의무 공시, 타 주제(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선택 공시(확대여부 의견수렴 예정) ▪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공시기준 적용하되,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톤 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선택공시 허용			
제3자인증	▪ 공시 의무화 2년(203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유예 및 면책제도	▪ (Scope3 배출량 공시)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산정 부담 고려, 의무화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 → 유예기간 동안 정부 차원의 업종별 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 (한시적 면책제도, Safe Harbor) 초기 3년('28~'30) 공시 정보 전체 대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면제(단, 고의적 그린워싱은 제외), 3년 경과 후에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 수집 정보, 미래 리스크 예측정보, 배출량 추정치 등 불확실성 높은 정보에 대해 면책기준 적용			

[자료] '26. 7. 8.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참고 재구성

ESG Trend

II. 주요 업종별 핵심쟁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표 2] 업종별 핵심쟁점 및 파급효과

업종	핵심 쟁점	파급 효과
제조·자동차·배터리 (공급망 및 가치사슬 리스크 중심)	제도상 유예되었으나 글로벌 완성차 및 OEM 고객사의 공급망 Scope 3 데이터 요구 및 공급망 실사, EU 배터리법·CBAM 등 글로벌 무역 규제 대응 필수	• 글로벌 완성차 및 고객사의 배출량 데이터 요구는 즉시 적용 • 유예 기간 동안 협력사 데이터 수집 체계 및 원천 증빙(Audit Trail) 관리 미흡 시 실질적인 영업 리스크로 전이
에너지·중화학·철강 (고탄소 배출 업종 및 전환 리스크 중심)	단순 배출량 수치 공시를 넘어, 감축목표 달성 위한 설비 투자 및 재무 이행계획(Transition Plan) 구체성 확보	• 감축목표·설비투자 계획 간 정합성이 떨어질 경우 시장 및 투자자 신뢰 훼손, 고탄소 공정·설비 가치 저하로 기업 재무 부담 증가
금융업 (금융배출량 및 전환금융 중심)	대출·투자 포트폴리오에 연결된 기업의 금융배출량 산정 정확도 확보 및 기후 리스크 평가	• 금융배출량 관리가 자본비용 및 위험가중자산(RWA)과 직접 연결 • 공시 데이터를 대출·투자 심사 기준에 반영, 친환경 전환기업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상품 개발 연계 전략 필요
IT·플랫폼·서비스업 (데이터센터,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 중심)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및 RE100 이행,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안전·공급망 노동인권 등 사회(S) 영역 영향력 입증	• 기후 리스크 외 비재무적 영향(Impact) 대응(이해관계자 요구) • 연결 종속회사 통제 체계 및 비재무 데이터 신뢰성 관리가 핵심
건설·엔지니어링 (현장 데이터 신뢰성 및 안전/환경 리스크 중심)	전국/해외 시공 현장의 Scope 1·2 온실가스 원천 데이터 검증(Audit Trail), 하도급 협력사 배출량 산정,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S) 이슈의 재무 영향 관리 필요	• 사후 단순 집계 방식의 검증 한계 발생, 현장 단위 내부통제 (ICSR) 구축과 안전·환경 데이터의 근거 관리가 기업 신뢰도와 PF 유동성 리스크 차단 핵심 요소
유통·소비재·물류 (연결 종속회사 및 가치사슬 공급망 리스크 중심)	다수 물류·유통 종속회사의 비재무 데이터 통합 관리, 입점·협력업체 대상 공급망 실사 및 친환경 포장·물류 대응	• 연결기준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정비, 협력사 실사데이터 및 결과 증빙 어려울 경우 글로벌 유통채널 유지와 시장 평가에서 불이익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작성

이사회 중심의 'ESG 거버넌스 정비 및 실질적 책임 체계' 수립

- 법정공시 전환은 ESG 정보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책임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의미
- 이사회와 경영진이 ESG 리스크 및 기회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공시 정합성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 수동적 규제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체질 개선 및 조직 내부 역량 강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내부통제 관점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감사추적성 확보

- 공시 데이터의 단편적 수집에서 벗어나, 데이터 발생 원천부터 최종 산출까지 추적 가능한 지속가능성 공시 내부통제 마련
- 단순 사후 검증이 아닌, 현장 단위의 입력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승인 라인을 체계화하여 공시 데이터의 근거(Audit Trail) 확보

재무적 공시 체계와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의 균형잡힌 접근

- 공시의 본질은 기업의 사업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
- 단기 정량수치 관리나 서식 대응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환경·사회적 영향(Impact)과 재무적 가치를 연계하는 이중중대성 관점 통합
- 기업은 GRI 기반 '영향 중요성'과 IFRS 프레임워크 기반 '재무 중요성'을 유기적 연계 구조로 통합 관리하는 공시 체계 확립 필요

ESG Trend

III. 기업 공시 지원 인센티브

[표 3] 정부의 기업 공시 이행 지원 및 공시 인센티브

업종	핵심 쟁점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KSSB 적용 파일럿 테스트) 주요 산업별(전기전자, 금융 등 7개 산업군)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공시 초안 작성 테스트 실시 •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기후부 주도의 통합 플랫폼 개발('28년 공개) 및 Scope 3 산정 지원 • (공급망 데이터 산정 및 ESG플랫폼)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DB 확충, 협력사가 다수 공시기업에 ESG 정보 제출가능한 '단일입력-다수 대응 플랫폼' 개발(~'29년)
ESG 종합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 (ESG 종합 컨설팅 패키지) 공시대상기업(~'29년) 및 수출형 중소·중견 협력사 대상 컨설팅 추진(기후부, 중기부) •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활성화) 산은/기은의 ESG 컨설팅 및 금융지원 활성화, 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경영), 중진공(공급망 실사 및 기후공시대응) 등 부처합동 정책자금 패키지 지원
투자자 공시 활용 및 전환금융 연계	•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확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활동)에 ESG 공시정보 적극 활용 • (전환금융 공급시 활용) 탄소감축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전환금융 공급 시 공시 정보 적극 활용

IV. 결론 및 시사점

(법정공시 체계로의 전환) 이번 방안은 로드맵 초안 대비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함으로써 ESG 공시를 권고적 성격에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법정공시 체계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인식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단기 규제 비용으로 인식되던 ESG 공시 제도를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동력으로 전환해야 함

(업종 특성 반영한 차별화 전략 필요) 업종별로 핵심 리스크(공급망 Scope3, 전환계획의 구체성, 금융배출량 등)가 상이한 만큼, 기업은 획일적 대응이 아닌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기업의 선제적 준비) '28년 1차 적용 대상 기업은 물론 향후 편입될 기업들도 유예기간 중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와 감사 추적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컨설팅·정책자금 등 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이행 부담 완화

(인증 생태계의 다양성 강화) EU 등 해외 주요국 선례와 같이 정형화된 재무 감사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별 현장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지속가능성 전문 검증기관(ISO/TIC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생태계 정립 추진 필요

향후 입법 및 제도화 일정

- **2026년 7~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08.05)' 등)
- **2026년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추진
- **2027년:** KSSB 공시기준 최종 확정 및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
- **2028년:** FY27 결산 사업보고서 내 ESG 공시 최소 시행
- **2030년 이후:** 제3자 인증 단계적 의무화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8월호에서는 8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중소중견대 2026년 제3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접수 공고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 판로 확대 기반 조성	(인증신청 대상)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제품에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기간연장) GR 인증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인증심사·평가방법) 「GR 인증요령」 제5조 및 해당 신청 제품의 GR인증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심사수수료) 인증 신규 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품목추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무료 단, 제품심사 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및 추가 성적서 발급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	8월 14일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02-6390-6730
중소중견대 2026년 2차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지원 공모 사업 공고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향상, 성능평가제도 활성화	(지원내용)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지원 공모 사업 (신청자격)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 기업 (대상제품) 성능평가제품 유형 총 17종 (전체 공공용 5종, 일부 공공용 12종) (선정혜택) 성능평가·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2개 제품) - 성능평가 및 컨설팅 비용 최대 75% 정부지원 (최소 5백만~ 최대 10백만원), 그 외 신청기업 부담 (단, 75%에 해당되는 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 신청기업이 부담) (지원조건)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 제품에 한해 평가기관에 수수료 지급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제품에만 수수료 지급 (심의까지 '26년 12월 4일 완료 必) (선정기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면 자료 및 추가 설문 등을 통해 ▲회사 규모, ▲제품 준비상태, ▲인증제도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8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013 itsc@kisa.or.kr

2026년 8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계속)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중소 중견 대 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기후부장관이 지정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신청자격)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②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8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중소 중견 2026년 3차 ESG공시 규제 대응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①환경정보 관리·공개 통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원청사 및 ESG 평가사의 환경정보 수요 대응, ESG 경쟁력 강화 지원 ②제도 이행 대상의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	(지원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당해연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 신청기업은 법인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 (단, 온실가스배출량3,000 ton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사용량 55 TJ미만인 소속사업장은 제외가능) (지원내용) 참여기업에 제도 안내 및 교육, 환경정보 등록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환경정보 공개 위한 검증대응 지원 등 - 환경정보 산출 위해 법인 조직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 기업별 이슈에 따른 등록 항목,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8월 3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담당 02-2284-1976, hyunari@keiti.re.kr
중소 중견 대 2026년 3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투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협력국의 환경분야 기술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지원	(지원대상) 협력국 내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지원규모) 2건 이내 (1건당 최대 100억원),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지원항목) 투자지원금은 총 사업비에 지원 비율을 적용, 위탁·전담기관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및 국제 감축실적 가격*으로 산정 *국제감축실적 가격 설정 기준: 협약 체결 시점 직전 3개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장내거래 가중평균가격 (올해 기준 가격 9,563원) (신청자격)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8월 31일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국제환경협력사업부 ghg@keco.or.kr / 032-590-3157, 3179, 3178

* 문의·상담 등은 이메일 통해 사전 문의 필수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DERI 제4기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은 기업 최고경영진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전문가들이 실제 기업 사례를 토대로 거버넌스 핵심 이슈와 전략적 해법을 다룹니다.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이 변화의 방향을 읽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는 통찰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DERI 제4기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포스트 상법개정 시대,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망과
이사회 의사결정

일시

26. 09. 02. ^수 - 11. 25. ^수

매주 17:00 ~ 18:30 **12주 과정 진행**

* 2026. 09. 23. (수) 추석연휴 휴강

장소

대신파이낸스센터 5F 대강당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교육 특전

- ✦ 과정 수료자 대상 수료증 수여
- ✦ 9~10주차 강의 이수 시
독립이사 교육 수료증 수여
- ✦ 수강생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 현장 미참석자 대상 강의 영상 제공
- ✦ 주간 ESG 미디어
이슈 레터 제공(수료 시까지)
- ✦ ESG 및 거버넌스 전문가
상담 제공

한국 거버넌스의 글로벌 가교

안유라

現 ACGA 한국 리서치 총괄
前 BlackRock 스텔어드십 애널리스트



전자주주총회 인프라의 현장

박중훈

現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상법 및 자본시장법 권위자

정준혁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중복상장과 주주동의의 실전

중복상장 관계자



이사회 독립성과 기업재무의 권위자

김우진

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前 산업자원부 사무관



한국형 가치투자의 개척자

최준철

現 VIP자산운용 대표



운용업계 최초
독립이사 수탁자책임위원장

신선경

現 신한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원장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변호사



한국형 주주행동주의의 설계자

이창환

現 일라인파트너스 대표
前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 상무



기관투자자 의결권 판단의 기준

정우영

법학박사
現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



국내 최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지휘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대한 의사결정의 최종 관문

황이석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거버넌스 개혁과 내부통제의 실전

천준범

現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KT 감사실장, 변호사



신청 및 문의 안내

교육 대상 회사 최고경영진 및 임원
(IR·기획·재무·법무·거버넌스 담당)

모집 인원 50명 내외

수강료 350만원 (VAT 별도)

문의처 유재오 책임연구위원
✉ jaeoh.yoo@daishin.com

수강 신청 26. 07. 27 (월) ~ 26. 08. 28 (금)

접수 방법



QR코드 스캔 후
링크 접속

* 수강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대신경제연구소 DERI 제4기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강의 주제 및 연사

주차	주제 및 주요 내용	연사
1주차 9/2	상법 개정 이후 K-거버넌스 해외기관투자자가 보는 한국 거버넌스와 자본시장	안유라 ACGA 한국리서치총괄
2주차 9/9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따른 기업대응 전략 수탁자책임과 주주행동주의의 경계 - 관여활동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신선경 신한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원장
3주차 9/16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준비 전자주주총회 제도 및 주주총회 실무를 고려한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소개	박중훈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4주차 9/30	주주행동시대,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속도 강화 주주연대 관점의 주주환원 및 이사회 개선 사례 점검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5주차 10/7	이제는 자본시장법이다: M&A 시장에 나타난 제도적 변화 법 개정이 M&A 실무 및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주차 10/14	상법개정 이후 의결권자문사의 새 판 상법 개정 이후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정책 변화 분석	정우영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
7주차 10/21	중복상장 규제 하의 기업 거버넌스 대응 전략 거래소 중복상장 규제에 의한 자본시장 및 기업전략 영향 조망	중복상장 관계자
8주차 10/28	국민연금의 시선으로 본 2026년 주주총회 그 이후 2026년 주요 사례 공유 및 2027년 정기주주총회 핵심 쟁점 전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9주차 * 11/4	이사회,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이사회 운영 이론과 국내외 주요 이슈 정리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0주차 * 11/11	주주가 기대하는 성장, 이사회가 만드는 가치 주주 기대수익률과 주가순자산비율을 중심으로 본 이사회 역할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11주차 11/18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배주주 리스크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정리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12주차 11/25	2027 주주총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수료식 2027년 정기주주총회 및 규제환경 핵심 전망 정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9주차/10주차 강연은 독립이사 교육 과정으로 운영

본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메일을 통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SG Event

한국ESG연구소 '2026년 하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성료

한국 ESG 연구소

2026년 하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2026. 07. 29. (수) 15:00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대강당



참가신청



목적

- 2026년 1차 KRESG 평가결과를 통한 책임투자 활용 방안
-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흐름과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주주총회 대응 과제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의 실질적 이행 과제

진행개요

일시	2026. 07. 29 (수) 15:00 ~ 17:00
참석 인원	50명 내외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5:00 - 15:05	인사말	백재욱 대표이사
15:05 - 15:30	「ESG평가, 운용의 언어로 말하다」 2026년 1차 KRESG 평가 결과를 통한 책임투자 활용방안 Q&A	황종현 본부장
15:30 - 15:55	「강화된 제도, 제한적 변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흐름과 의결 결과, 2027년 주주총회 대응과제 Q&A	정우영 본부장
15:55 - 16:10	Break Time	
16:10 - 16:50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의 실질적 이행 과제 Q&A	원종현 前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16:50 - 17:00	네트워킹 및 마무리	



국내 의안 분석, 수탁자 책임활동 지원 및 ESG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는 7월 29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본부 황종현 본부장이 "ESG평가를 운용의 언어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6년 1차 ESG 평가 결과***와 책임투자 활용 방안을 소개하였다. 기업 규모에 따른 ESG 격차의 최대 요인은 환경(E) 영역이며, 정기평가 사이 이슈 모니터링이 등급 변동의 조기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평가 결과를 유니버스 구성과 주주권 행사로 연결하는 실행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밝혔다.

* [APPENDIX 2] 참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거버넌스본부 정우영 본부장이 "강화된 제도, 제한적 변화"라는 주제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기관투자자의 판단 기준과 관여 방식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2027년 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및 시장 인프라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을 역임한 원종현 한국ESG연구소 독립이사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방향과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실무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ESG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진 협의와 전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전략 수립과 **스튜어드십 코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APPENDIX 1] 참고

【 APPENDIX 1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 '26.7.24. 위원회 의결)

※ 2026년 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의 원칙 개정 논의 사항

- '16년 제정 이후 10년 만의 첫 개정으로, 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
- 적용 자산군 확대, ESG·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확대, 협력적 관여활동의 반영, 이행점검 명문화 등 개정
- 후속 일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실무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기관 자격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후 6개월 내 개정사항의 반영여부·계획 제출을 추진, '27년 이행점검부터 개정사항을 적용(^{26년도 이행점검은 개정 전 코드 기준으로 진행})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개정사항]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적용 자산군 확대	국내 상장주식 중심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으로 적용 확대 (구체적 범위는 기관투자자 자율 판단)	원칙 적용 1
ESG 요소 반영	별도 명시 없이 재무·비재무 요소 포괄적 언급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요소 명시	원칙 도입목적 5, 안내지침 1-1, 3-2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확대	의결권 행사, 대화 중심	경영전략·위험관리 점검, 이사회 협의, 주주제안·소송 참여 및 투자 확대·축소·배제 등 투자의사결정까지 포함	원칙 도입목적 5, 원칙 3
협력적 관여활동 근거 신설	명시 규정 없음	관계 법령 준수 하에 다른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적 대화 등 관여활동 수행 가능	안내지침 4-5
이행점검 명문화	자율적 성격, 명문 규정 미비	가이드라인 개정 후 6개월 내 반영여부·계획 제출, 2027년 이행점검부터 개정사항 적용	부칙 및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주요 개정사항]

원칙	핵심 내용	주요 개정사항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현행 유지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 유지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에 반영 한다.	점검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
4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기준과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 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세부지침 '공개' 명시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현행 유지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 유지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 유지

[자료] 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2026.07.24)」 보도자료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26.07.24)」 참고 재구성

【 APPENDIX 2 】

한국ESG연구소 2026년 1차 KRESG 평가 결과¹⁾

I. KRESG 평가 방법론

1. 평가 모델 개요

- **(평가 목적)** E·S·G 비재무적 성과와 리스크를 KRESG 모델로 평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책임투자 활동을 지원
- **(산정 방식)** 지표별 합산점수에 산업별 가중치 반영 후 위험·제재 차감 → 정규분포 변환해 상대등급 부여, 컨트롤러시 발생 시 등급 하락 가능성 공시
- **(평가 주기)** 상·하반기 연 2회 평가, 매년 모델 재검토 및 국내외 ESG 동향 반영·개선

[평가모델 구성]

영역	대분류	중분류	지표
ESG 통합	대분류 20개	중분류 35개	지표 138개
환경(E)	대분류 7개	중분류 10개	지표 45개
사회(S)	대분류 8개	중분류 13개	지표 46개
지배구조(G)	대분류 5개	중분류 12개	지표 47개

주) 2026년 1차 평가부터 전 영역에서 사업보고서 상 제재 정보를 평가 출처에 추가

[평가 자료 출처]

구분	주요 출처
ESG 공통	기업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환경(E)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등
사회(S)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지배구조(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관, 금융감독원 등

2. 평가 대상 기간 및 등급 분류 체계

- **(대상기간)** 2026년 1차 평가는 FY2025년 및 2026년 3월 말까지 공시된 성과 대상(적시성 확보 위해 지표 성격에 따라 일부 수시 반영)
- **(등급체계)** ESG 관리수준·리스크 노출빈도에 따라 우수(S·A+·A)·보통(B+·B)·미흡(C·D) 3단계 7등급 부여, 통합등급 '우수'는 E·S·G 각 영역 최소충족요건 미달 시 한 단계 하향

[평가 등급 체계]

우수			보통		미흡	
S	A+	A	B+	B	C	D
Excellent	Very Good	Good	Satisfactory	Fair	Laggard	Poor

주) 통합 'S'등급은 E·S·G 각 영역 A 이상, 'A+'등급은 B+ 이상, 'A'등급은 B 이상 충족 시 부여 (미충족 시 한 단계 하향)

1) 본 '한국ESG연구소 2026년 1차 KRESG 평가 결과' 자료는 한국ESG연구소가 2026.7.6. 발간한 「2026년 1차 KRESG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신경제연구소가 재구성하였음. 이하 데이터 및 표 출처 표기 생략

【 APPENDIX 2 】

II. 2026년 1차 평가 대상

1. 2026년 1차 평가 대상 기업

- **(선정 기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상장사, 비상장사 중 회사채 발행기업, 고객사 요청기업 등을 당사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
- **(2026년 1차 대상)** 상장 1,027개사 + 비상장 136개사 = 총 1,163개사 (전기 대비 +9개사; 14개사 제외, 23개사 신규 편입)
- **(구분 기준)** 자산규모(2조원 이상 여부)·상장 여부·산업분류(15개 산업군 34개 분류)에 따라 구분, 기관투자자 고객의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서비스 확대

[평가대상 기업 구분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303개사 / 2조원 미만 860개사
상장 여부	상장 1,027개사 / 비상장 136개사 (* 현 시점 상장 구분과 다를 수 있음)
산업 분류	15개 산업군 34개 산업 분류를 적용한 KRESG 산업분류 체계

[평가대상 기업 수 추이]

'23.1차	'23.2차	'24.1차	'24.2차	'25.1차	'25.2차	'26.1차
1,031	1,056	1,092	1,107	1,136	1,154	1,163

주) 평가대상 기업 수는 '17년 상반기(884개사)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단위: 개사)

III. 2026년 모델 개선사항

1. 모델 개선 방향

- **(배경)** 글로벌 ESG 공시 규제 강화로 기업 대응 수준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평가모형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모델 개선
- **(중점)** 중대재해 등 핵심 위험요인 제재 강화, 자본시장 밸류업 기초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이행수준과 실질적 책임 확인을 중심으로 평가체계 고도화

2. 영역별 개선사항

영역	주요 개선사항
환경(E)	법적 제재 지표에 사업보고서 공시내역 출처 추가(신뢰성 강화), 정량지표는 동종산업 분위평가 방식 도입,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점제 및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 지표 신설
사회(S)	최신 국내외 ESG 규제동향·법령 반영해 평가체계 개선, 중대산업재해·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제재출처 추가 및 배점 가중치 확대, 다양성·고용환경·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배점체계 개선
지배구조(G)	밸류업 기초에 부합하는 중장기 주주환원계획 지표 신설 및 유사 배당지표 통합, 불성실공시가 횡령·배임보다 과도하게 감점되던 배점기준 수정(최종 감점 합리적 상한선 신설)

【 APPENDIX 2 】

IV. ESG 통합 평가 결과

1. 2026년 등급분포 특징

- **(산정 방식)** 절대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ESG 수준을 고려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종 등급 산정. B+등급을 중앙값, 표준편차를 등급구간으로 하는 정규분포 모델 적용
- **(전년 대비)** 중앙값·표준편차 소폭 증가 → 보통 수준 기업 성과 개선 + ESG 대응 우수·미흡 기업 간 수준 격차 확대
- **(등급별 변화)** B등급 제외 전 등급 커트라인 소폭 상승, B·B+등급 기업 증가한 반면 A·C등급 기업은 감소 → 중위권으로 수렴하며 상위권 진입·유지 요구 성과 수준 상승

[통합 등급 충족 커트라인과 기업분포]

구분	S	A+	A	B+	B	C	D
2026.1차	83.3 (0)	70.7 (13)	53.8 (208)	36.8 (340)	19.9 (440)	14.6 (137)	0 (25)
2025.1차	81.7 (0)	69.5 (10)	52.9 (238)	36.4 (307)	19.9 (414)	14.3 (145)	0 (22)

* 등급 충족 커트라인 점수(괄호는 해당 등급 기업 수), 통합(ESG 종합) 기준

2. 영역별 평가결과

- **(환경, E)** 우수·미흡 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크나 중앙값 상승·표준편차 감소(변별력 유지). 유해화학물질·Scope3 공시기업 증가로 전반적 공시수준 향상, 향후 구체적 감축목표 수립과 실질적 감축성과 필요
- **(사회, S)** 공급망 ESG 관리 강화 등으로 중앙값 상승. 다만 제재 확대 반영으로 B+등급 기업 증가·A등급 기업 감소, 향후 사회적 영향이 큰 제재를 사전 예방하는 리스크관리체계 필요
- **(지배구조, G)** B+·B 등급 비중이 70%를 초과하며 세 영역 중 가장 안정적인 분포. 상법 개정 등으로 표준편차 소폭 증가(변별력 강화), 법적 최소요건 충족을 넘어선 실질적 개선 필요

[영역별 상위 기업(Top 5)]

순위	통합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1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E&A	현대홈쇼핑
2	SK하이닉스	금호타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SK
3	롯데웰푸드	LG전자		케이티앤지
4	LG전자	엘에스일렉트릭	LG생활건강	부산은행
5	삼성전자	SK케미칼	포스코DX	롯데하이마트

* 사회(S) 영역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모비스 공동